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예술인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위원회 소속 변경 등〉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344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4  |
| 1. 총괄적 검토 .....                            | 4  |
| 2. 조문별 검토 .....                            | 12 |
| 가. 제명,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 12 |
| 나. 예술인 권리보호와 증진(제3장, 안 제10조~제17조) .....    | 17 |
| 다.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제5장제1절, 안 제22조~제34조) ..... | 24 |
| 라. 분쟁조정(제5장제2절, 안 제35조~제47조) .....         | 43 |
| 마. 구제 및 시정조치 등(제6장, 안 제48조~제54조) .....     | 57 |
| 바. 보칙(제7장, 안 제55조~제61조) .....              | 76 |
| 사. 부칙 .....                                | 84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7. 31.
3. 회 부 일 : 2026. 8. 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 법체계는 그동안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으므로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 현행법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여 예술인 권리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피해구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에 실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이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정당하게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및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예술지원기관 등에 소속된 자는 예술 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여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위원회는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 및 예술인조합을 결성·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이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위원회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다. 예술인의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결격사유·제척·신분보장·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의 공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 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신분보장·제척·비밀유지, 조정위원회의 구성·분쟁조정·합의권고·조정중지·직권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 사.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사무처로 하여금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게 하며, 사무처는 조사결과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등 위원회의 구제조치·시정권고·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III. 검토의견

#### 1. 총괄적 검토

대한민국 헌법은 문화국가원리를 기본이념으로 채택하면서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sup> 이에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 보장법」’이라 한다) 제정에 관한 논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의 발생으로 본격적으로 촉발되어 제20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sup>2)</sup>를 거친 후 제21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음.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처리 건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

1) 「대한민국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 제20대 국회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정법임에도 공정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있고,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공무원의 수도 5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 등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상황임.

### <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등 신고 현황 >

(단위 : 건, '26. 7. 31. 기준)

| 신고<br>연도 | 불공정<br>계약<br>강요 | 수익<br>배분<br>거부<br>지연 | 예술<br>활동<br>방해<br>간섭 | 정부<br>부당<br>이용<br>제공 | 부당<br>거래<br>조건<br>변경 | 성희롱<br>성폭력 | 예술<br>자유<br>침해 | 예술<br>지원<br>사업<br>차별 | 예술<br>지원<br>사업<br>공정성<br>침해 | 예술인<br>조합<br>활동<br>방해 | 불이익<br>조치 | 합계  |
|----------|-----------------|----------------------|----------------------|----------------------|----------------------|------------|----------------|----------------------|-----------------------------|-----------------------|-----------|-----|
| 2022     | 10              | 17                   | 4                    | -                    | 2                    | 5          | 3              | 1                    | 1                           | -                     | -         | 43  |
| 2023     | 10              | 99                   | 11                   | 3                    | 27                   | 10         | 5              | 2                    | 2                           | -                     | -         | 169 |
| 2024     | 3               | 137                  | 6                    | 4                    | 19                   | 12         | 2              | 2                    | 6                           | 1                     | 2         | 194 |
| 2025     | 19              | 175                  | 13                   | 4                    | 50                   | 22         | 16             | 6                    | 8                           | 1                     | 2         | 316 |
| 2026     | 19              | 138                  | 4                    | 7                    | 52                   | 11         | 6              | 8                    | 12                          | -                     | 5         | 262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개정안은 ①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던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예술인 권리 보장 위원회로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고,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하며, ② 위원회가 예술인 권리 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③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의무와 계약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으로 옮겨 규정하며,

④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변경하며, ⑤ 기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만 허용되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제보를 예술 자유 침해 등 일부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확대하고, ⑥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 대상, 조사, 구제조치 요청,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임.

###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구 분                                 | 주요내용                                                                                                                                                               |
|-------------------------------------|--------------------------------------------------------------------------------------------------------------------------------------------------------------------|
| 제1장 총칙<br>(안 제1조~제6조)               | ○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의 정의에 서면 계약 체결 의무 위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추가                                                                                                                  |
| 제3장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br>(안 제10조~제17조) | ○ 예술인 권리 보장 기본계획 수립·시행<br>○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 계약 체결 의무와 계약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이관                                                                            |
| 제5장 예술인 권리보장 기구 등<br>(제22조~제47조)    | ○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함<br>○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및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변경                                                                |
|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br>(안 제48조~제54조)      | ○ 예술 자유 침해, 예술지원 사업 차별, 예술지원 사업 공정성 침해 금지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제보에 따른 조사 실시<br>○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 대상, 조사, 구제조치 요청,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변경 |
| 제7장 보칙<br>(안 제55조~제61조)             | ○ 제재처분 등의 제척기간 신설                                                                                                                                                  |

개정안은 총 7개 장, 61개 조문으로 구성<sup>3)</sup>되어 있으며, 장 별로 보면 ① 총칙, ②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③ 예술인 권리 보호와 증진, ④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⑤ 예술인 권리보장 기구 등, ⑥ 구제 및 시정조치 등, ⑦ 보칙으로 구분됨.

이러한 개정안과 현행법 조문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 비교표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
|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 제4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
| 제4조(예술인의 역할)                 |                              |
|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등)             |
| 제6조(다른법률과의 관계)               | 제6조(다른법률과의 관계)               |
|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
|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
|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
|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 제10조(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
|                              | 제11조(예술인 권리 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 제12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
|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 제13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
|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 제14조(불공정행위의 금지)              |
|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 제15조(예술인조합 결성 및 활동방해의 금지)    |

3) 현행법은 총 6개 장, 41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 제16조(서면 계약 체결 의무)                 |
|                                       | 제17조(계약서의 보존)                     |
|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 제18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
| 제17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 제19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
| 제18조(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 제20조(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
| 제19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                  | 제21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              |
|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 제22조(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
|                                       | 제23조(기능)                          |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등)                   |
|                                       | 제25조(위원장의 직무)                     |
|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 제26조(위원의 결격사유)                    |
|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 제27조(위원의 제척 등)                    |
|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2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                                       | 제29조(위원회의 회의)                     |
| 제25조(의결의 공개)                          | 제30조(의결의 공개)                      |
|                                       | 제31조(사무처의 설치)                     |
|                                       | 제32조(사무처의 사무)                     |
|                                       | 제33조(경비 등 지원)                     |
| 제26조(비밀유지의무)                          | 제34조(비밀유지의무)                      |
| 제27조(예술인보호관)                          |                                   |
|                                       | 제3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                                       | 제3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                                       | 제37조(위원의 신분보장)                    |
|                                       | 제38조(조정부)                         |
| 제37조(분쟁조정)                            | 제39조(분쟁의 조정)                      |
|                                       | 제4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                                       | 제41조(자료 요청 등)                     |
|                                       | 제42조(조정의 효력)                      |
|                                       | 제43조(합의권고)                        |

| 현행법                   | 전부개정안                 |
|-----------------------|-----------------------|
|                       | 제4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                       | 제45조(직권조정결정)          |
|                       | 제46조(조정 비용 등)         |
|                       | 제47조(비밀유지의무)          |
|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 제4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
|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 제49조(신고 사실의 조사)       |
|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 제50조(조사절차의 종결)        |
|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 제5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
| 제32조(구제조치)            | 제52조(구제조치)            |
| 제33조(시정권고)            | 제53조(시정권고)            |
| 제34조(시정명령)            | 제54조(시정명령)            |
|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 제5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
| 제36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제56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 제57조(불이익조치 금지)        |
|                       | 제58조(제재처분 등의 제척기간)    |
|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59조(권한의 위임·위탁)       |
|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제41조(과태료)             | 제61조(과태료)             |

우리 문화예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강국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예술환경으로 인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술인이 창작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위원회는 부처 책임 하 설치 및 운영이 원칙이며, 총리 소속 위원회 과다 설치 시 전체 국정운영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인데, 별도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단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운영 중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조사 등을 수행하는 현행 방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여 의결이 문화체육관광부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및 처분 권한을 이양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사건처리 및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위원회 사무를 보좌하는 사무처를 설치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와 함께 위원회의 소속과 기능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견과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하에서 개정안의 신설 또는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취지·효과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함.

## 2. 조문별 검토

### 가. 총칙(제1장, 안 제1조~제6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u>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u>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 <u>직업적</u> -----,<br>-----<br>-----<br>-----<br>-----.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1. -----<br>-----.                                                            |
|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u>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u>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 가. -----<br><u>국민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소양을</u> -----<br>-----<br>-----            |
| 나. (생략)                                                                                                                                         | 나. (현행 제2호나목과 같음)                                                             |
| 1.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 2. (현행 제1호와 같음)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4. “예술지원사업”이란 <u>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에</u>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4. ----- <u>제6호에</u> -----<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p>5. (생략)</p> <p>6.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u>&lt;신설&gt;</u></p> <p>가. ~ 라. (생략)</p> <p>7.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u>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u>(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p> <p><u>&lt;신설&gt;</u></p> <p>8. ~ 9. (생략)</p> <p>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p> <p>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p> <p>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p> <p>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p> <p>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p> <p><u>&lt;신설&gt;</u></p> <p>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u>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u></p> <p>②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p> | <p>5. (현행과 같음)</p> <p>6. -----<br/>-----<br/>-----<br/>-----.</p> <p>가. <u>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u></p> <p>나. ~ 마. (현행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p> <p>7. -----<br/>-----<br/>-----<u>업으로 하는 자로서</u>-----<br/>-----<br/>-----.</p> <p>8. “예술단체”란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p> <p>9. ~ 10.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p> <p>11. -----<br/>-----<br/>-----.</p> <p>가. 제7조를 -----</p> <p>나. 제8조제1항을 -----</p> <p>다. -----</p> <p>라.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p> <p>마. 제1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p> <p>바.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p> <p>사. 제57조를 위반한 행위</p> <p>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① <u>예술인의 표현의</u> -----<br/>-----<br/>-----.</p> <p>②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p> |

| 현행                                                                                                                                                                                                                                                                                                                                                                                                                                                                                                                                                                                                                                                                                                                                                   | 개정안                                                                                                                                                                                                                                                                                                                                                                                                                                                                                                                            |
|------------------------------------------------------------------------------------------------------------------------------------------------------------------------------------------------------------------------------------------------------------------------------------------------------------------------------------------------------------------------------------------------------------------------------------------------------------------------------------------------------------------------------------------------------------------------------------------------------------------------------------------------------------------------------------------------------------------------------------------------------|--------------------------------------------------------------------------------------------------------------------------------------------------------------------------------------------------------------------------------------------------------------------------------------------------------------------------------------------------------------------------------------------------------------------------------------------------------------------------------------------------------------------------------|
| <p><u>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u></p> <p>③ <u>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u></p> <p>④·⑤ (생략)</p> <p>제4조(예술인의 역할) <u>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u></p> <p>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① <u>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u></p> <p>② <u>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u></p> <p>③ <u>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u></p> <p>④ <u>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 <u>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② <u>국가기관등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 <p><u>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u></p> <p>③ <u>예술인은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u></p> <p>④·⑤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제4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① <u>예술인은 국민의 문화적, 예술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u></p> <p>②~④ (현행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p> <p>&lt;삭제&gt;</p> <p>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 -----<br/>-----<br/>-----<u>예술인의</u><br/>-----<br/>-----.</p> <p>② -----<u>예술활동을</u>-----<br/>-----, <u>예술지원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예술인이</u></p> |

| 현 행                                                                                                                                         | 개 정 안                                                                                                                                                                                                                                       |
|---------------------------------------------------------------------------------------------------------------------------------------------|---------------------------------------------------------------------------------------------------------------------------------------------------------------------------------------------------------------------------------------------|
| <p>③~⑤ (생 략)</p> <p>⑥ 국가기관등은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 략)</p> | <p>합리적인 이유 없이-----<br/>-----.</p> <p>③~⑤ (현행과 같음)</p> <p>⑥ 국가기관등은 예술지원사업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p>⑦ 국가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p> |

현행법은 제2조제10호에서 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예술인조합활동 방해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이외에 개정안에서 새롭게 신설하고 있는 서면 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와 현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던 불이익조치<sup>4)</sup>를 새롭게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

####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불이익조치(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

함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 제57조에 따른 불이익조치의 대상은 예술인권리침해 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제보한 자와 관련 조사를 위하여 출석·진술한 자가 포함되고 있고, 이들 중에는 예술인의 친족 등 관계인으로서 예술인이 아닌 자가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는 예술인이 아닌 자에 대한 권리침해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개정안과 같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예술인등권리침해행위”로 변경하는 방안과 현행법 제38조제3항과 및 제41조제1항제2호5)와 같이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하지 않고 위반시 별도의 제재방안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9조제4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국가기관 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나. 예술인 권리보호와 증진(제3장, 안 제10조~제17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장 예술인의 <u>직업적 권리의</u> 보호와 증진                                             | 제3장 예술인의 <u>권리</u> 보호와 증진                                                                                             |
|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제22조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br>-----.                                       |
| 1.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피해 예술인 구제                                                    | 1. -----<br>-----                                                                                                     |
| 2.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2. -----<br>-----                                                                                                     |
| 3.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 3. -----<br>-----                                                                                                     |
| 4.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및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                                           | 4. -----<br>-----                                                                                                     |
| 5.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지원                                      | 5. -----<br>-----                                                                                                     |
| <신 설>                                                                      | 제11조(예술인 권리 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술인 권리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1. 예술인 권리 보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                                                                            | 2.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에 관한 사항                                                                                                |
|                                                                            | 3. 예술인 권리 보장 정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                                                                            | 4.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 5.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                                                                            | 6. 그 밖에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② 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 현행                                                                                                                                                                                                                                                                                                                                                                                                                                                                                                                                       | 개정안                                                                                                                                                                                                                                                                                                                                                                                                                                                                                                                                                                                                                           |
|------------------------------------------------------------------------------------------------------------------------------------------------------------------------------------------------------------------------------------------------------------------------------------------------------------------------------------------------------------------------------------------------------------------------------------------------------------------------------------------------------------------------------------------|-------------------------------------------------------------------------------------------------------------------------------------------------------------------------------------------------------------------------------------------------------------------------------------------------------------------------------------------------------------------------------------------------------------------------------------------------------------------------------------------------------------------------------------------------------------------------------------------------------------------------------|
| <p>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① <u>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u>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u>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u>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투명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u>마련하여야</u> 하고, 선정심사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u>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u>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p> <p>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u>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u>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lt;신설&gt;</p> | <p><u>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p> <p>③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및 예술인 등을 포함한 관련 기관이나 관련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과 관련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① <u>예술지원기관은</u>-----<br/>-----<br/>-----<br/>-----.</p> <p>② <u>예술지원기관은</u>-----<br/>-----<br/>-----<br/>-----<u>마련하여야</u><br/><u>한다.</u></p> <p>③ <u>예술지원기관은</u>-----<br/>-----<br/>-----<br/>-----<br/>-----<br/>-----.</p> <p>제13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u>예술지원기관의 장은</u> -----<br/>-----<br/>-----<br/>-----<br/>-----.</p> <p>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p> |

| 현행                                                                                                                                                                              | 개정안                                                                                                                          |
|---------------------------------------------------------------------------------------------------------------------------------------------------------------------------------|------------------------------------------------------------------------------------------------------------------------------|
|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 ~ 5. (생략)                                                                                                                                                                    | 제14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예술지원기관 -----<br>-----<br>-----<br>-----<br>-----<br>-----.                                                 |
|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
|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①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불공정행위의-----<br>-----<br>-----.                                                                                             |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예술단체(이하 “예술인조합”이라 한다)는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 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술인조합 결성 및 활동방해의 금지) ① -----<br>-----<br>-----<br>-----<br>-----<br>-----<br>-----, -----대통령령으로-----위원회에-----<br>-----. |
| ③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이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                                                               | ② -----<br>-----<br>예술지원기관-----<br>-----<br>-----,<br>-----.                                                                 |
|                                                                                                                                                                                 | ③ 예술지원기관-----<br>-----<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p>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3. (생략)</p> <p>⑤ (생략)</p> <p><u>&lt;신설&gt;</u></p> | <p>-----.</p> <p>④ 예술지원기관-----</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서면 계약 체결 의무) 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p> <p>1. 계약 금액</p> <p>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p> <p>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p> <p>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p> <p>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p> <p>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p> <p>③ 「예술인 복지법」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p> <p>제17조(계약서의 보존) 예술사업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
| <p><u>&lt;신설&gt;</u></p>                                                                                                                                                        |                                                                                                                                                                                                                                                                                                                                                                                                                                                                                                                                                                                                                                                                         |

안 제11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는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가 5년마다 예술인 권리보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예술인권리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 기반 조성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개정안은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가 예술인 권리보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및 적극적 정책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sup>6)</sup>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가 되는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도 기본계획 작성 권한을 갖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②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한편, 안 제16조는 문화예술용역<sup>7)</sup>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며, 계약서에 계약금액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계약서 명시사항을 적지 않거나, 계약서를 주고 받지 않는 경우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되며, 아울러 안 제17조는 예술사업자가 해당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의 두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안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

안 제16조, 제17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현재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인데,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께 발의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345호,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있어서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전업예술인들은 고용형태상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비율<sup>8)</sup>이 높고,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많아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계약서를 작성하

---

7)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8) 2024년 전업예술인 기준 프리랜서 비율은 61.7%임

문화체육관광부, 「2024 예술인 실태조사」. 2025.

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이었음.

이 경우 예술인 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2016년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3970호, 2016. 5. 4. 시행) 개정을 통하여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였고, 2019년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6887호, 2020. 6. 4. 시행) 개정을 통하여 계약서 보존 의무를 부과하였음.

당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정<sup>9)</sup>하고 있던 「예술인 복지법」에 해당사항을 규정할 수 밖에 없었음.

그러나, 계약서 상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구두 계약 등으로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예술인의 경제적 권리,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받는 저작권, 예술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예술인에 대한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는 「예술인 복지법」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정당하게 보장받도록 하는 목적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9) 「예술인 복지법」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다.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제5장제1절, 안 제22조~제34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장 예술인 <u>권리구제</u> 기구 등                                                                                                                                                                                    | 제5장 예술인 <u>권리보장</u> 기구 등                                                                                                 |
| 제1절 예술인 <u>권리보장</u>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 제1절 예술인 <u>권리보장</u> 위원회                                                                                                  |
| 제20조(예술인 <u>권리보장</u>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u>권리보장</u>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2조(예술인 <u>권리보장</u> 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① -----<br>-----<br>-----<br>-----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술인 <u>권리보장</u> 위원회를 둔다. |
| <신 설>                                                                                                                                                                                                       |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 제20조(예술인 <u>권리보장</u>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2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
| 1.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 제7조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및 제8조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
|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에 따른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
|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4. 제31조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 5. 제48조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 6.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 6. 제49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
| 7.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7.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                                                                                                   |

| 현행                                                                                                                                                                                                                                                                                                                                                                                                                                                                                                                                                                                                                 | 개정안                                                                                                                                                                                                                                                                                                                                                                                                                                                                                                                                                                                                                                                                      |
|--------------------------------------------------------------------------------------------------------------------------------------------------------------------------------------------------------------------------------------------------------------------------------------------------------------------------------------------------------------------------------------------------------------------------------------------------------------------------------------------------------------------------------------------------------------------------------------------------------------------|--------------------------------------------------------------------------------------------------------------------------------------------------------------------------------------------------------------------------------------------------------------------------------------------------------------------------------------------------------------------------------------------------------------------------------------------------------------------------------------------------------------------------------------------------------------------------------------------------------------------------------------------------------------------------|
| <p>8. <u>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 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u></p> <p>9. <u>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u></p> <p>&lt;신설&gt;</p> <p>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u>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③ (생략)</p> <p>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互選)</u>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둔다.</u></p> <p>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① 위</p> | <p><u>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u></p> <p>8. 제5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p> <p>9.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p> <p>10.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p> <p>11.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p> <p>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예술사업자의 영업시간 내에 예술사업자의 본점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u></p> <p>제2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br/>-----<br/>-----.</p> <p>② -----<br/>-----<br/>-----<br/>--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p> <p>1. 예술인 권리침해 구제 분과위원회</p> <p>2.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p> |

| 현행                                                                                                                                                                                                                                                                                                                                                                                                                                                                                                                                                           | 개정안                                                                                                                                                                                                                                                                                                                                                                                                                                                                                                                                                                                                                                                                                                                                                                       |
|--------------------------------------------------------------------------------------------------------------------------------------------------------------------------------------------------------------------------------------------------------------------------------------------------------------------------------------------------------------------------------------------------------------------------------------------------------------------------------------------------------------------------------------------------------------|---------------------------------------------------------------------------------------------------------------------------------------------------------------------------------------------------------------------------------------------------------------------------------------------------------------------------------------------------------------------------------------------------------------------------------------------------------------------------------------------------------------------------------------------------------------------------------------------------------------------------------------------------------------------------------------------------------------------------------------------------------------------------|
| <p><u>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⑥ <u>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lt;신설&gt;</u></p> <p>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u></p> <p>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p>1. <u>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u></p> | <p><u>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⑥ <u>국무총리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⑦ <u>제4항의 부문별 위원회의 구성·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2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u></p> <p>1. <u>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u></p> <p>2. 「정당법」에 따른 당원</p> <p>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p> <p>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② <u>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u></p> <p>제27조(위원의 제척 등) ① -----<br/>-----<br/>-----제23조제1항-----<br/>-----.</p> <p>1. -----<u>그 가족(「민법」 제7</u></p> |

| 현행                                                                                                                                                                                                                                                                                                                                                                                                                                                                                                                                                                                                                                                                                             | 개정안                                                                                                                                                                                                                                                                                                                                                                                                                                                                                                       |
|------------------------------------------------------------------------------------------------------------------------------------------------------------------------------------------------------------------------------------------------------------------------------------------------------------------------------------------------------------------------------------------------------------------------------------------------------------------------------------------------------------------------------------------------------------------------------------------------------------------------------------------------------------------------------------------------|-----------------------------------------------------------------------------------------------------------------------------------------------------------------------------------------------------------------------------------------------------------------------------------------------------------------------------------------------------------------------------------------------------------------------------------------------------------------------------------------------------------|
| <p><u>자이었던 사람이</u>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 5. (생략)</p> <p><u>&lt;신설&gt;</u></p>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u>심의·의결의 공정</u>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u>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u>할 수 있다.</p> <p>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p> <p>1. 제22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3.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p> <p><u>&lt;신설&gt;</u></p> | <p>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가족이었던 사람이-----</p> <p>-----</p> <p>2. ~ 5. (현행과 같음)</p> <p>6. 위원이 해당사건의 당사자와 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p> <p>② -----공정한 직무를 집행을 -----있으면-----,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lt;단서 삭제&gt;</p> <p>③ -----제1항-----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p> <p>제2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p> <p>1. 제26조제1항의-----</p> <p>2. -----</p> <p>3. 제34조의-----</p> <p>제2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p> |

| 현행                    | 개정안                                                                                   |
|-----------------------|---------------------------------------------------------------------------------------|
| 제25조(의결의 공개) ①·② (생략) |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 <신설>                  |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30조(의결의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
|                       | 제31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 ⑤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신설>                  | 제32조(사무처의 사무)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 1.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업무 지원                                                             |
|                       | 2. 제39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
|                       |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관한 조사                                  |
|                       |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지원                                                      |
|                       | 5. 그 밖에 위원회가 담당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
| <신설>                  | 제33조(경비 등 지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 수행 경비 등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6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심의·의결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br>제34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개요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구분됨.<sup>10)</sup>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범정부적이며 거시적인 주제를 다루며 국가 최고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여러 중앙행정기관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중앙행정기관<sup>11)</sup> 소속 위원

###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 11)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는 각 부처 소관 사무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개별 정책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기능과 권한에 따라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됨.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기능·권한별 분류 >

| 구분                      | 행정위원회                                                                                                                                             | 자문위원회                                                                                  |
|-------------------------|---------------------------------------------------------------------------------------------------------------------------------------------------|----------------------------------------------------------------------------------------|
| 개념                      | 행정기관의 사무 일부를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합의제행정기관                                                                                            |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                                                         |
| 권한                      |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 있음.<br>(규칙 제정, 재결 등의 권한 보유 <sup>12)</sup> )                                                                           |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 없음                                                      |
| 설치<br>요건 <sup>13)</sup> | ①업무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br>②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br>③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br>④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 ①업무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br>②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 사무<br>기구 <sup>14)</sup> | 설치가능                                                                                                                                              | 설치 불가(예외적 가능)                                                                          |

※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행정위원회’는 업무의 독자성·계속성·상시성이 있을 때 설치될 수 있으며<sup>15)</sup>, 사무기구를 둘 수 있는데 사무기구 설치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법률에 근거<sup>16)</sup>를 두고 있음.

반면,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으나, 행정기

1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1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5)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행정위원회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있음.

1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관의 장이 직접 사무를 지원하기 곤란하고,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있음.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 중 사무기구를 두고 있는 위원회는 대부분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그 설치 근거를 법률 또는 시행령에 두고 있음.<sup>17)18)</sup>

####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도서관법」(법률 제21588호, 2026. 10. 29. 시행예정)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사무기구)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8)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정보공개위원회와 교육부장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지만, 시행령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그 밖에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한다.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10(사무기구)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2) 위원회 지위 변경 및 사무처 설치 관련 검토사항

현행법 제20조<sup>19)</sup>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이며, 위원회의 해당 업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과 관계된 업무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 업무에 해당<sup>20)</sup>한다고 할 수 있어 사무기구를 둘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은 제27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21)</sup>

### 1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4. 제31조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중결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6.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7.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20)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라 ‘예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 중임.

### 2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
2.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현행법 시행령 제13조<sup>22)</sup>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 권익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호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관’이 보호관으로, ‘예술인권리보호과장’이 담당관으로 지정된 상황이며, 예술인권리보호과 직원 5명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 예술인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이후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 건 수가 2023년 169건에서 2025년 316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예술인권리보호과는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업무 외에도 예술인 복지 정책 업무<sup>23)</sup>를 동시에 수행 중으로 현재의 인력만으로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 관련 업무의 적극적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② 보호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보호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은 제12조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된다.

⑥ 보호관의 자격·직무·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권익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23) 2026년 기준 예산 규모 약 1,500억원

또한,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사건 및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두고 있지 않아 당사자의 신고가 어려운 사건 등에 있어 권리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00호,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547호,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직권조사 권한 신설은 자발적으로 침해사실을 밝히기 어렵거나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침해 사례를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직권조사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조사대상 건 수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조사관 증원 등을 반영한 사무국 설치가 전제되어야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개정안은 안 제49조제2항<sup>24)</sup>을 통하여 직권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고, 증가하고 있는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사무기구를

---

2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49조(신고 사실의 조사 등) ② 위원회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제보에 따라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사무처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의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인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로 변경<sup>25)</sup>하고 사무처 설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인바,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권리침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의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처 관련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업무의 성격상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관련 제도 운영 취지에 적합한지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행과 같이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유지하더라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 소속 자문위원회의 경우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사무

---

25) 안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행정위원회에 해당함.

기구를 신설할 경우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및 처분권한을 위원회로 이양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반면, 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위원회는 부처 책임 하 설치 및 운영이 원칙이므로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따른 ‘예술인 권리 보장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분리하여 행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sup>26)</sup>

---

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아가, 안 제31조의 ‘사무처의 설치’는 개정안 제22조의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안 제22조의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설치하지 않고 자문 위원회로 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무처를 설치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무처를 둘 수 있는 경우 그 근거를 개별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3) 기타 검토사항

안 제23조제2항은 위원회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술사업자의 영업시간 내 예술사업자의 본점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주주명부란 주식, 주권 및 주주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가 상법규정에 의해 작성하여 비치하는 장부임. 「상법」 제396조<sup>27)</sup>는 이사가 주주명부를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방편으로서의 감독권을 누리기 위해 회사의 기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 등을 담당하기 위한 규정임.<sup>28)</sup>

27)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8) 권순일, 「주식 상법 회사편 제3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p.389.~393.

이러한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로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도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직접 가지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있음.<sup>29)</sup>

그런데, 개정안은 안 제11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sup>30)</sup>을 통하여 위원회와 사무처가 예술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1조(예술인 권리 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및 예술인 등을 포함한 관련 기관이나 관련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과 관련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예술지원기관·예술교육기관의 장, 예술단체·예술인조합의 대표자, 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신고 사실의 조사 등) ⑤ 사무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피신고인·피해자·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안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도 위원회는 주식회사인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통하여 주주명부를 제출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안 제23조제2항은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행법 제23조제1항제1호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7조제1항제1호는 배우자를 「민법」 제779조<sup>31)</sup>에 따른 가족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의 제척 사유를 확대하여 위원회 심의에 공정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법관의 제척 제도를 두고 있는 「민사소송법」은 가족이 아닌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sup>32)</sup>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법률 중 배우자 대신 가족을 제척사유 대상자로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개

---

31)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2)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정안을 포함한 대부분의 입법이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로 가족의 개념을 포함하는 친족<sup>33)</sup>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체계의 통일성 등의 관점에서 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한 안 제27조제1항제1호의 ‘가족’은 현행과 같이 ‘배우자’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33)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라. 분쟁조정(제5장제2절, 안 제35조~제47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절 <u>분쟁조정</u><br>제3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예<br>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br>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인권리<br>침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br>회”라 한다)를 둔다.<br>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br>을 심의·의결한다.<br>1.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관련한 분<br>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br>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br>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br>사항<br>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br>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치<br>는 사항<br>③ 사무처는 조정위원회의 업무를<br>지원한다.                                                |
| <신 설> | 제3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br>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br>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br>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br>서 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br>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br>교의 법학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br>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br>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br>있는 사람<br>3.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br>거래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br>있는 사람<br>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br>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br>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br>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7조(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3. 제47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li> </ol> |
| <신설> | <p>제38조(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p> <p>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p> <p>⑤ 그 밖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신설> | <p>제39조(분쟁의 조정) ① 예술인권리침해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p>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 <p><u>조정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u>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4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2조에 따른 조정조서, 제45조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li> <li>2. 제45조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li> <li>3. 그 밖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li> </ol> <p>④ 그 밖에 예술인권리침해 관련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p> <p>제4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u>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u></p> <p>②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p> <p>③ 위원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p>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p>제37조(분쟁조정) ① 위원회는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을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보호관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p> <p>⑤ 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 또는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p> <p>&lt;신설&gt;</p> | <p>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p> <p>제41조(자료 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예술사업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42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제43조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 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p> <p>⑤ 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또는 제5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p> <p>제43조(합의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p> |



| 현 행                                   | 개 정 안                                                                                                                                                                                                                                                                                                                                                                                                                                                                                                                                                                                                                                                                            |
|---------------------------------------|----------------------------------------------------------------------------------------------------------------------------------------------------------------------------------------------------------------------------------------------------------------------------------------------------------------------------------------------------------------------------------------------------------------------------------------------------------------------------------------------------------------------------------------------------------------------------------------------------------------------------------------------------------------------------------|
| <p>&lt;신 설&gt;</p> <p>&lt;신 설&gt;</p> | <p>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p> <p>④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 이의신청의 절차 및 진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조정 비용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 수행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47조(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현행법 제37조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sup>34)</sup>

그러나, 2026년 7월말 기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건 984건에서 조치 및 처리된 사건 550건 중 분쟁조정을 통하여 해결된 사건은 44건에 불과한 상황임.

이는 분쟁조정이 성립해도 「민법」상 계약의 일종인 화해의 효력에 그쳐 강제력이 재판상 화해에 비하여 낮은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sup>35)</sup>

이에 개정안은 법학 분야 교수의 직에 있는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예술인 권리보호 및 공정거래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위원이 구성되며 이들이 위원으로

---

3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7조(분쟁조정) ① 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보호관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⑤ 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 또는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35)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소송 종료 및 강제집행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고, 준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반면, 「민법」상 화해를 통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합의한대로 확정되어 화해 이전의 주장과 착오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해의 목적 외 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함.

활동하는 기간 직무상 독립과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고, 조정위원회가 한 조정의 효력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분쟁조정제도는 정식재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엄격한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법적 분쟁에 익숙하지 않고 경제력이 부족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법 체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35조는 ‘조정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정위원회를 어느 기관에 둘지가 누락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그 산하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 점<sup>36)</sup>을 감안할 때,

---

3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이 되는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 아래에 두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34조와 안 제47조는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경제적 측면과 유사입법례<sup>37)</sup>를 참고하여 두 조항을 한 개의 조항으로 합치고 보칙 장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sup>38)</sup>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 중단에 관한 분쟁조정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7)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38) ‘실체규정이란 하더라도 여러 개의 장에 걸쳐서 규정되는 경우에는 입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칙의 장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620.

한편, 안 제60조는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형법」 제127<sup>39)</sup>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의 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127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의 누설죄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sup>40)</sup>한 때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만으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유사입법<sup>41)</sup>들도 위원회의 위원 등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기

---

39)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0)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다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이를 감안하여 유사입법과 같은 형량으로 벌칙 규정을 보칙 다음장인 제8장으로 별도의 장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sup>42)</sup>

그런데, 안 제34조 및 제47조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비공개 심의내용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규율하되,

직무상 비밀 중 개인정보의 누설과 목적 외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sup>43)</sup> 개정안의 벌칙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수위에 비하여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

42) ‘실체규정이나 보칙과 함께 벌칙을 규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벌칙의 존재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바람직한 입법례가 아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753.

43)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 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sup>44)</sup>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법문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 위원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므로 비밀<sup>45)</sup>에 해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9호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과 같은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아울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

---

4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45)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또는 특정인이나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진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20도2212]

정보를 누설 금지 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의무규정을 수정할 경우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도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 및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관련된 조항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조정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판단되고,

현행법에 따른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행 피해구제 위원회'를 통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sup>46)</sup>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연계·통합하거나, 부처 소속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위원회를

---

4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쟁 조정’ 심의·의결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단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분쟁 조정 관련 사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필요시 기존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행 피해구제 위원회’에 분과위원회<sup>47)</sup>를 두고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4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둔다.

마. 구제 및 시정조치 등(제6장, 안 제48조~제54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장 구제 및 <u>시정조치</u>                                                                                                                                                                                                                                                                                                                                                                                                                            | 제6장 구제 및 <u>시정조치 등</u>                                                                                                                                                                                                                                                                                                                                                                                                                                |
|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br>①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u> 이를 신고할 수 있다.<br><br>②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u>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u> 이를 신고할 수 있다.<br><br><신 설><br><br>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br><br>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br>① -----<br>-----<br>-----위원회에-----<br>-----.<br><br>② 제18조제2항·제3항을-----<br>-----<br>-----<br>-----사람은 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br><br>③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제3자는 위원회에 이를 제보할 수 있다.<br><br>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보가 -----<br>-----.<br><br>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보절차, 제4항에-----<br>-----.<br><br>제4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위원회는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라-----<br>-----사무처로-----<br>-----<br>-----. |
|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신고된 경우 <u>보호관으로</u> 하여금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설&gt;</u></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보호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p> <p>④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피신고인·피해자·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u>&lt;신설&gt;</u></p> <p>⑥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p> | <p>② 위원회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제보에 따라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사무처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제보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br/>-----사무처로 하여금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사무처는-----<br/>-----<br/>-----<br/>-----.</p> <p>⑤ 사무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br/>-----<br/>-----<br/>-----<br/>-----.</p> <p>⑥ 제5항에-----<br/>-----<br/>-----<br/>-----.</p> <p>⑦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⑧ 사무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br/>-----.</p> <p>제50조(조사절차의 종결) ① 위원회는 제48조제1항부터 제48조제3항까지에-----신고 또는 제보-----</p> |

| 현행                                                                                                                                                                                                                                                                                                                                                                                                   | 개정안                                                                                                                                                                                                                                                                                                                                                                                                                                                                                                                                                                                                                                                                                                                                                                                                                |
|------------------------------------------------------------------------------------------------------------------------------------------------------------------------------------------------------------------------------------------------------------------------------------------------------------------------------------------------------------------------------------------------------|--------------------------------------------------------------------------------------------------------------------------------------------------------------------------------------------------------------------------------------------------------------------------------------------------------------------------------------------------------------------------------------------------------------------------------------------------------------------------------------------------------------------------------------------------------------------------------------------------------------------------------------------------------------------------------------------------------------------------------------------------------------------------------------------------------------------|
| <p>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조사 절차를 종결</u>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u>&lt;신설&gt;</u></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u>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u>, 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br/><u>&lt;단서 신설&gt;</u></p> <p><u>&lt;신설&gt;</u></p> <p>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u>보호관</u>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 <u>제30조제1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 <p>-----<u>조사</u>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u></p> <p>4. <u>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이 법에 따른 예술지원기관, 예술인·예술단체,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인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u></p> <p>5. <u>신고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u></p> <p>6. <u>피신고인이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p> <p>7. <u>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여 온 경우</u></p> <p>8. <u>신고인이 신고서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u></p> <p>9. <u>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u></p> <p>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8호 <u>까지에</u>-----<u>당사자에게</u>-----<u>통지한다.</u> 다만, <u>피신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 한한다.</u></p> <p>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5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u>사무처</u>는 제49조제1항에-----<u>제50조제1항</u>-----<br/>-----<br/>-----<br/>-----<br/>-----<br/>--.</p> <p>②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u> 제2항에 따라 <u>위원회가</u> <u>구제절차</u>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u>신고인에게</u>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u>신고인</u>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u>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u>제32조(구제조치)</u> ① 위원회는 <u>제31조 제1항에</u>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u>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u>관계 기관에</u> 요청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사의뢰</li> <li>2. 행정처분</li> <li>3.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li> </ol> <p>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u>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후 서면으로 <u>관계 기관에</u>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u>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u>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u>제33조(시정권고)</u>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u></p> | <p>③ <u>위원회는</u> -----<u>구제절차</u>를 -----<u>당사자에게</u>-----.</p> <p>④ <u>제3항에</u>-----<u>당사자는</u>-----<u>위원회에</u>-----.</p> <p>⑤ (현행과 같음)</p> <p><u>제52조(구제조치)</u> ① -----<u>제51조 제1항에</u> -----<br/>-----<br/>-----<br/>-----<br/><u>관계기관에</u>-----<br/>-----<u>요청할 것을</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는</u> -----<br/>-----<br/>-----.</p> <p>③ <u>위원회는</u> -----<br/>-----<br/>-----.</p> <p>④ -----<br/>-----<br/>-----<u>위원회에</u>-----.</p> <p>⑤ (현행과 같음)</p> <p><u>제53조(시정권고)</u> ① <u>위원회가</u> <u>제51조</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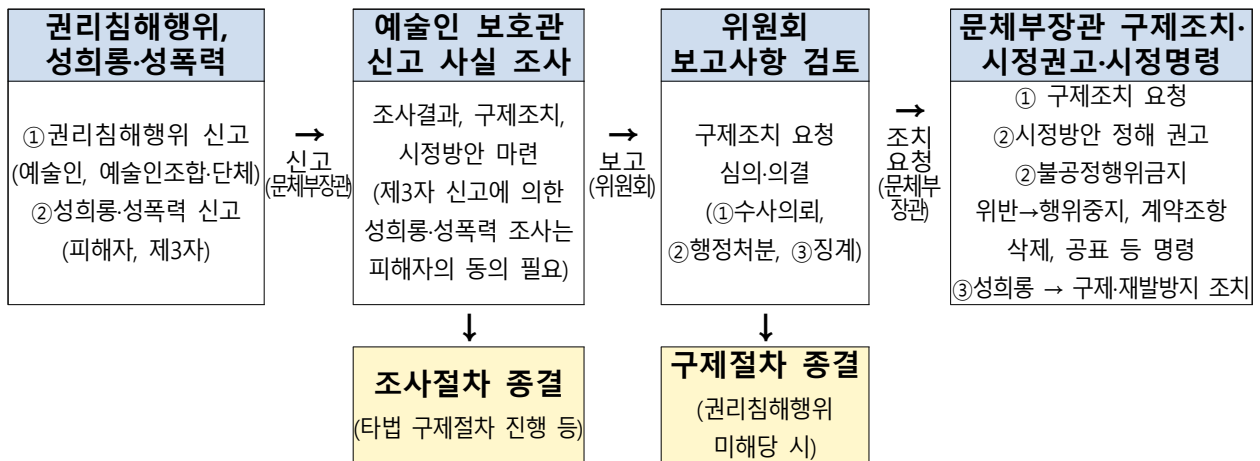
| 현행                                                                                                                                                                                                                                                                                                                                                                                                                                                                                                                                                                                                                                                                                                                      | 개정안                                                                                                                                                                                                                                                                                                                                                                                             |
|-------------------------------------------------------------------------------------------------------------------------------------------------------------------------------------------------------------------------------------------------------------------------------------------------------------------------------------------------------------------------------------------------------------------------------------------------------------------------------------------------------------------------------------------------------------------------------------------------------------------------------------------------------------------------------------------------------------------------|-------------------------------------------------------------------------------------------------------------------------------------------------------------------------------------------------------------------------------------------------------------------------------------------------------------------------------------------------------------------------------------------------|
| <p>관은 위원회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 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 및 제38조제3항에서 같다),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시정방안의 이행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p> <p>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p> | <p>제1항에-----<br/>-----<br/>-----예술인-----<br/>-----<br/>-----.</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br/>예술인-----<br/>-----위원회-----<br/>회에-----.</p> <p>④ -----<br/>예술인-----<br/>-----위원회-----<br/>회에-----.</p> <p>&lt;삭제&gt;</p> <p>제54조(시정명령) ① -----제51조제1항에-----<br/>제2조제11호라목·바목에-----<br/>-----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p> |

| 현행                                                                                                                                                                                                                                                                                                                                                                                                                                                                                                                                                                                                                                                                                                                                                                                                                      | 개정안                                                                                                                                                                                                                                                                                                                                                                                                                                                                                                                                                                                                          |
|-------------------------------------------------------------------------------------------------------------------------------------------------------------------------------------------------------------------------------------------------------------------------------------------------------------------------------------------------------------------------------------------------------------------------------------------------------------------------------------------------------------------------------------------------------------------------------------------------------------------------------------------------------------------------------------------------------------------------------------------------------------------------------------------------------------------------|--------------------------------------------------------------------------------------------------------------------------------------------------------------------------------------------------------------------------------------------------------------------------------------------------------------------------------------------------------------------------------------------------------------------------------------------------------------------------------------------------------------------------------------------------------------------------------------------------------------|
| <p>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희롱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li> <li>2.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li> <li>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ol>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일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 해당 예술교육기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p> | <p>-----명할 수 있다.-----위원회는-----</p> <p>-----</p> <p>-----</p> <p>-----</p> <p>-----</p> <p>-----</p> <p>② 위원회는 -----</p> <p>-----제14조제1항제1호에-----</p> <p>-----.</p> <p>③ -----제51조제1항에-----</p> <p>-----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p> <p>-----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lt;후단 삭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희롱·성폭력 -----</li> <li>2. 성희롱·성폭력의 -----</li> <li>3. -----성희롱·성폭력 -----</li> </ol> <p>④ 위원회는 -----</p> <p>-----</p> <p>-----</p> <p>-----</p> <p>-----</p> <p>⑤ 위원회는 -----</p> <p>-----</p> <p>-----</p> |

| 현 행                                                                                                                                                         | 개 정 안                                                                                                                                                     |
|-------------------------------------------------------------------------------------------------------------------------------------------------------------|-----------------------------------------------------------------------------------------------------------------------------------------------------------|
| <p>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⑥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p>-----<br/>-----예술지원기관<br/>에-----.</p> <p>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⑦ -----<br/>-----<br/>-----대통령령으로 정<br/>한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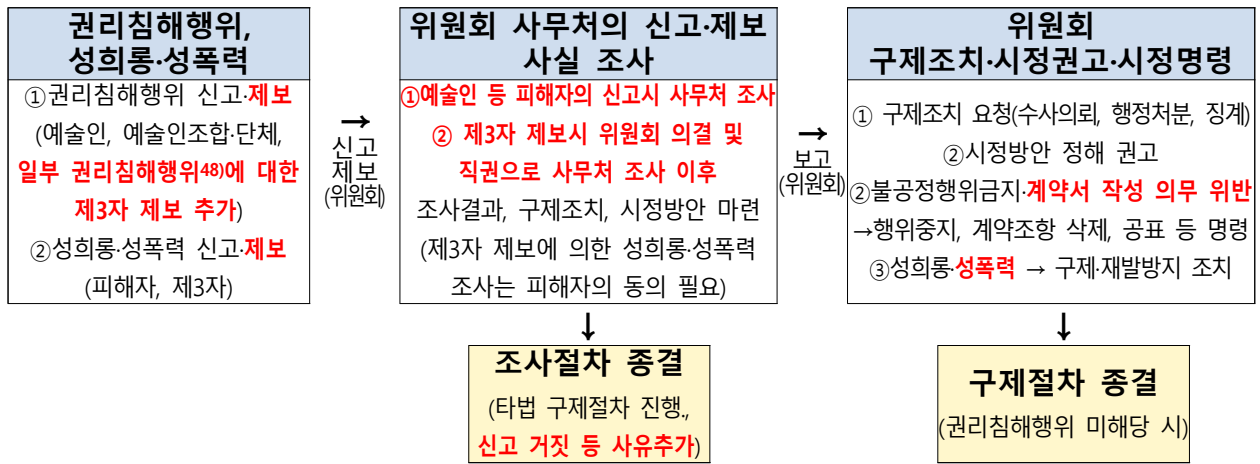
현행법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구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짐.

### < 현행법에 따른 예술인 권리구제 흐름도 >



개정안에 따라서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됨.

## < 개정안에 따른 예술인 권리구제 흐름도 >



상세하게 현행과 개정안의 구제절차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효과 및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①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신고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제조치·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신고의 대상, 구제조치·시정권고·시정명령의 주체가 국무총리 소속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로 변경됨.

아울러,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인 예술인보호관에게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보고를 검토한 후 구제 조치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48) 안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금지), 제8조제1항(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제9조(예술지원사의 공정성 침해 금지)를 위반한 예술인 침해행위만 제3자에 의한 신고 가능

개정안은 위원회 소속 사무처가 신고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보고하면 행정위원회로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 표명권을 가진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가 직접 구제조치 등을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됨.

이와 같이 개정안을 통하여 심의·의결과 행정조치의 주체가 일원화됨으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예술인권리침해사건이 기존보다 신속하게 해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현행법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만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안 제3자의 신고가 있을시 이를 조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 중 개정안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49)의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예술

4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검열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①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차별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① 예술지원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작성된 명단을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

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위반도 해당 사실의 발생을 알게 된 제3자의 제보에 따른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이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제외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신고 주체를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만 규정한 취지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예술계의 자정작용의 일환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임.<sup>50)</sup>

그러나,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경우 사안이 은폐되어 예술인권리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신고 또는 제보를 법률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중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 예술인조합 결성 및 활동 방해의 금지 위반, 서면 계약 체결 의무 위반,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sup>51)</sup>을 제3자의 신고 또는 제보 대상에서 제외

---

용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술지원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예술지원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배제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50) 문화체육관광부 등,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자료집」, 2020. p. 19.

5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4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공정행위 금지 및 서면 계약 체결 의무 위반 등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고 없이 제3자 제보만으로 조사를 개시할 경우, 피해자의 조사 협조를 얻기 어려우며 추가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예술 표현의 자유 위반과 관련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

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5조(예술인조합 결성 및 활동방해의 금지)** ④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2. 예술인조합의 결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예술인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술인과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6조(서면 계약 체결 의무)**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제57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거나 제49조제5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49조제5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대해서만 제3자 신고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다만, 안 제57조의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은 예술가와 예술사업자 등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전제된다고 볼 수 없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사업자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sup>52)</sup>를 할 경우 이를 알게 된 제3자가 이를 다시 신고 또는 제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하여, 안 제57조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포함할 경우 이를 제3자의 제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현행법은 예술인보호관의 직권조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안 제49조제2항은 위원회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을 발생한 사실을 안 제3자의 제보에 따라 조사

---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사무처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49조제2항은 ‘직권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제3자의 제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의 ‘직권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현재 우리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00호,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54호,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술인보호관에게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강유정의원안 · 조계원의원안의 ‘직권조사’ 조항 비교 >

| 개 정 안                                                                                                                               | 강유정의원안                                                                                                                                                                                                                        | 조계원의원안                                                                                                                                                                                                                |
|-------------------------------------------------------------------------------------------------------------------------------------|-------------------------------------------------------------------------------------------------------------------------------------------------------------------------------------------------------------------------------|-----------------------------------------------------------------------------------------------------------------------------------------------------------------------------------------------------------------------|
| 제49조(신고 사실의 조사 등) ② 위원회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u>제보</u> 에 따라 <u>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u>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u>직권으로</u> 사무처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u> <u>예술인보호관에게 직권으로 조사하도록</u>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및 조사절차의 종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u> <u>직권으로</u>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조사절차의 종결 및 위원회 통지, 구제절차의 종결 및 위원회 보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직권 조사 권한 신설은 자발적으로 침해사실을 밝히기 어렵거나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침해 사례를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예술인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고,

개정안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사무처가 신설되는 만큼 제3자 제보의 전제 없이도 사무처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제3자 제보의 전제 없이 직권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점<sup>53)</sup>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④ 현행법은 조사절차의 종결 사유로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53)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등으로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해 신고한 경우 등에도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법률의 구체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실시로 인하여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안 제50조제1항각호<sup>54)</sup>는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조사를 통하여 예술인권리침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5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50조(조사절차의 종결)** ① 위원회는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4.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이 법에 따른 예술지원기관, 예술인·예술단체,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인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 피신고인이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여 온 경우
8. 신고인이 신고서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9.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 한한다.

한편, 현행법 제30조제2항은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0조제2항은 이를 ‘당사자’로 변경하고 있고, 단서를 신설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에는 현행과 달리 신고인, 피신고인 포함되고 있음.

「형사소송법」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sup>55)</sup>

비록, 조사사건이 범죄사건과는 성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범죄 사건의 고발인과 유사한 제보를 한 제3자를 조사절차 종결시 통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알 권리의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당사자’에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보를 한 제3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

---

55)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⑨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제8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 보임.

또한,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도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조사결과를 알 필요가 있으므로 예술인권리침해 사건 조사절차 종결 통지 대상에 피해자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⑤ 현행법 제34조제3항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성희롱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제34조제4항은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일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sup>56)</sup>

개정안 제54조제3항은 현행법 제34조제3항의 시정명령 대상에 성폭

---

5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시정명령) ③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성희롱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
2.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일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 해당 예술교육기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력행위를 추가하고 있어서, 안 제5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정명령을 하기 전 성폭력행위를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며 수사과정에서 구속될 수 있음.<sup>57)</sup>

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수사과정 중에 있고 구속되어서 수감되어 있을 수 있는 범죄피의자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안 제54조제4항의 의견진술의 대상에 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57)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보칙(제7장, 안 제55조~제61조)

| 현행                                                                                                                                                                                                                                                                                                                                                                                                                                                                               | 개정안                                                                                                                                                                                                                                                                                                                    |
|----------------------------------------------------------------------------------------------------------------------------------------------------------------------------------------------------------------------------------------------------------------------------------------------------------------------------------------------------------------------------------------------------------------------------------------------------------------------------------|------------------------------------------------------------------------------------------------------------------------------------------------------------------------------------------------------------------------------------------------------------------------------------------------------------------------|
|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기<br>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br>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br>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br>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br>제할 수 있다.<br>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br>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br>배제하도록 통보한 자<br>2.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br>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br>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br>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br>통보한 사람<br>② (생략)                                                                                                                                                                            | 제5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예술지<br>원기관은-----<br>-----<br>-----<br>-----<br>-----<br>-----<br>1. 위원회가 제54조제5항에-----<br>-----<br>-----<br>2. 제18조제2항-----<br>---성희롱 또는 성폭력으로-----<br>-----<br>-----<br>② (현행과 같음)                                                                                                                 |
| 제36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br>예술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br>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br>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br>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br>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예술<br>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예술사업자의 지위<br>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예술사업<br>자에게 부과된 제34조제1항에 따른<br>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br>일부 1년간 예술사업자의 지위를<br>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고, 제35조제<br>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br>해당 행정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예<br>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br>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br>행 중인 때에는 예술사업자의 지위<br>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br>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br>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 제56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br>-----<br>-----<br>-----<br>-----<br>-----<br>-----법인(이하 “양수<br>인등”이라 한다)은-----<br>-----<br>② -----<br>-----<br>-----제54조제1항에-----<br>-----<br>---양수인등에게-----, 제55조제<br>1항에-----<br>-----<br>-----양수인등에게-----<br>-, -----<br>-----양수인등에게-----<br>-----<br>-----, 양수인등이-----<br>-----<br>----- |

| 현행                                                                                                                                                                                                                                                                                                                                                                                                                                                                                                                                                                                                         | 개정안                                                                                                                                                                                                                                                                                                                                 |
|------------------------------------------------------------------------------------------------------------------------------------------------------------------------------------------------------------------------------------------------------------------------------------------------------------------------------------------------------------------------------------------------------------------------------------------------------------------------------------------------------------------------------------------------------------------------------------------------------------|-------------------------------------------------------------------------------------------------------------------------------------------------------------------------------------------------------------------------------------------------------------------------------------------------------------------------------------|
| <p><u>법인</u>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37조(분쟁조정) ① 위원회는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을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보호관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p> <p>⑤ 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 또는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p> <p>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자</p> | <p>③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양수인등은 종전의 예술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제2항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p> <p>&lt;삭제&gt;</p> <p>제57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br/>-----<br/>----- 신고 또는 제보하거나 제49조제5항에-----</p> |

| 현행                                                                                                                                                                                                                                                                                                                                                                                                                                                                                                                                                                                                                                                            | 개정안                                                                                                                                                                                                                                                                                                                                                                                                                |
|---------------------------------------------------------------------------------------------------------------------------------------------------------------------------------------------------------------------------------------------------------------------------------------------------------------------------------------------------------------------------------------------------------------------------------------------------------------------------------------------------------------------------------------------------------------------------------------------------------------------------------------------------------------|--------------------------------------------------------------------------------------------------------------------------------------------------------------------------------------------------------------------------------------------------------------------------------------------------------------------------------------------------------------------------------------------------------------------|
| <p>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불이익조치(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정한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p> <p>&lt;신설&gt;</p> | <p>-----<br/>-----<br/>-----<br/>-----<br/>-----.</p> <p>② <u>예술지원기관</u>,-----<br/>-----제18조제3항-----<br/>-----<br/>-----<br/>-----제49조제5항에-----<br/>-----<br/>-----<br/>-----<br/>-----<br/>-----.</p> <p>&lt;삭제&gt;</p> <p>&lt;삭제&gt;</p> <p>제58조(제재처분 등의 제척기간) 예술<br/>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br/>성희롱·성폭력행위가 종료된 날<br/>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예술인권리<br/>침해행위 또는 예술활동 관련 성희<br/>롱·성폭력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br/>따른 행정처분, 징계조치를 할 수 없</p> |

| 현행                                                                                                         | 개정안                                                                                                                 |
|------------------------------------------------------------------------------------------------------------|---------------------------------------------------------------------------------------------------------------------|
|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다. 다만, 제2조1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7년으로 한다.                                                              |
|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br>-----위원회-----<br>-----<br>-----.                                                         |
| 제4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위원회 또는 사무처의-----<br>-----<br>-----.                                                                          |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br>-----<br>-----.                                              |
| <신 설>                                                                                                      | 제61조(과태료) ① -----<br>-----<br>-----.                                                                                |
| <신 설>                                                                                                      |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br>2. 제17조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br>3. 제54조제1항-----<br>-----<br>----- |
| 1.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2.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삭 제>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br>-----<br>-----.                                                                                          |
|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1. 제21조제2항을 -----<br>-----<br>-----                                                                                 |

| 현 행                                                             | 개 정 안                                        |
|-----------------------------------------------------------------|----------------------------------------------|
| 2.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49조제5항 및 제6항을 -----<br>-----<br>-----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 -----<br>-----<br>위원회의 위원장이-----<br>-----. |

안 제55조제1항제2호는 예술지원기간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서 기존의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이외에 성희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있음.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sup>58)</sup>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고 이를 금지<sup>59)</sup>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을 비롯하여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 5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은 위반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가 아니고, 단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sup>60)</sup>이 되고 있음.<sup>61)</sup>

‘유죄 판결’은 공소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실체판결로 형선고의 판결, 형 면제의 판결, 형 선고유예의 판결을 말함.<sup>62)</sup> 따라서 위반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의 경우 현행 형사사법체계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안 제55조제2항제2호의 성희롱 부분은 ‘성희롱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56조제3항과 제4항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규정에서 기존 예술사업자의 영업에 대한 선의의 양수인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전력 및 위반행위사실을 양도인이 제공하고, 양수인등이 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61) 다만, 성희롱의 경우 개별적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의율하여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62) 이주원, 「형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23. p.623.

이는 현행법령의 제재처분 효과 승계 입법례를 분석한 결과 위반행위 사실 및 제재처분 전력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으로 양수인 이전의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sup>63)</sup>를 반영한 사항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안 제58조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단,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예술의 자유 침해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의 경우 7년)이 지나면 행정처분, 징계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처분 등의 제척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23조<sup>64)</sup>는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제재처분은 이 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sup>65)</sup>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63)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23-612호),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2023. 7.

64)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65)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2021, p.90.

행정처분은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재처분과는 다른 유형으로 보  
이므로 안 제58조는 「행정기본법」과 별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이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징계시효는 10년<sup>66)</sup>으로,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보다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대한 징계 시효를 짧게 하는 부당한 효  
과를 발생하게 하므로 안 제58조에서 제1항과 제2항을 분리하여 제1  
항은 행정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현재와 같이 규정하고, 제2항은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67)</sup>

---

66)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67)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하며,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규정한다.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과 당사자의 약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유사하지만, 그 기간이 일  
반적으로 짧고 정지·중단 제도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684.

## 사. 부칙

| 개 정 안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br>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로 본다.                                         |
|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은 제24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위원장으로 호선된 사람은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본다.<br>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부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0조는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지원기관은 현행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한 상황이므로, 해당 기관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은 안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둘째, 이 법 시행 이전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했으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개정안에 따라 조사 주체가 예술인보호관에서 사무처로 변경되므로, 기존 신고에 따른 조사를 사무처가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 제28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신고는 개정안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에 따라 안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구제조치 요청,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로 변경되므로, 현행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진행 중인 구제조치 요청 등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를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는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과 연계처리되어야 하는 「예술인 복지법」이 입법화 될 경우 현행 「예술인 복지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의 까지 및 제3호의2의 과태료 규정<sup>68)</sup>이 삭제되고, 개정안은 해당 과태료

---

68) 「예술인 복지법」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융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

의 규정을 승계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sup>69)</sup>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는 비록 개정안에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고 있지만 「예술인 복지법」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 제정 전의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과거 부칙규정<sup>70)</sup>과 같이 둘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84

자등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삭제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7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66호, 2021. 9. 24.>

**부칙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다.

## □ 제도 개요

- (목적)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 지원을 통해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
- (내용) 「예술인권리보장법」 등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 사건의 ①신고·상담창구, ②조사, ③위원회(심의·의결), ④피해 지원, ⑤예방교육 등 방지 체계 구축

## □ 주요 내용

## ① 권리보장 운영 체계

- (전담 조직) 예술인보호관 및 담당관, 전담부서 지정('22.10월~)
  - \* ▲(예술인보호관) 예술정책관 ▲(담당관) 예술인권리보호과장 ▲(전담부서) 예술인권리보호과
- (심의·의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 (구성) 2기 위원회('25.2.26.~'27.2.25., 임기 2년)
    - \* 위원 12명, 3개 분과(예술인 권리보장 2개 분과, 성희롱·성폭력 방지 1개 분과)
  - (현황) 전체위 35회, 분과위 78회, 조정위 26회 등 **총 139회 개최**('26.7.31. 기준)

## ② 세부사업 현황('26.7.31. 기준)

- (예술인권리침해) 신고사건 984건 중 550건을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치 및 처리 중(434건은 현재 조사중)
  - ※ 위와 별도로, 「예술인 복지법」 상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등 위반 관련해서는 신고사건 159건 중 96건을 조치 및 처리 중(63건은 현재 조사중)
- (서면계약)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서면계약 작성 상담·지원\* 및 신고 대응, 전자계약 체결 지원\*\*으로 서면계약 활성화 지원
  - \* (서면계약 작성 상담 등) ('24년) 741건→ ('25년) 789건
  - \*\* (전자계약 체결 지원) ('24년) 214건→ ('25년) 302건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예술 분야별,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예방, 예술계약 교육 시행(온·오프라인)
  - \* (교육 수강) ('24년) 61,095명→ ('25년) 74,503명